틀은 갖췄는데…중량감 떨어지고 호남 편중…예상보다 약한거 아냐?

안철수 전국조직화 어디까지 왔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이자 신당 창당 작업을 준비중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이 10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2개 권역 실행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조직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대구와 경북, 세종, 강원 등 4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지역 조직화를 이끌어갈 인사들로 꾸려졌다.

조만간 대구와 경북 등 4개 지역도 실행위원을 인선·발표할 계획이어서 이달 중 전국적인 조직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과의 만남에서 참가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세종·강원 명단 발표 안해
군소단체 소속·개인사업자가 대부분

하지만, 이날 전국적으로 인선된 실행위원을 살펴보면 중량감 있는 인사가 없고, 이념적 스펙트럼도 겹쳐 정치적 지향성이 모호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행위원 면면 분석해보니='내일' 측이 이날 발표한 실행위원 중에는 저명인사나 명망가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주로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향토 인사'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정치권, 법조계 출신 인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군소단체 소속이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애초 예상보다 약해 보인다는 평가다.

정치권 인사의 경우에도 스펙트럼이 지나치게 넓어 중도 성향의 안 의원 세력으로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정치권 출신 인사 상당수 중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회 출신 등 원외 인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무소속의 경우 기초의원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정의당 출신인사도 일부 포함됐다.

특히 이념적으로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자유총연맹 출신의 강신봉 전 지역위원장과 최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로 위기를 맞고 있는 통합진보당 출신의 천중근 전남도 의원도 이번 실행위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전남 80명 인선='내일'은 지난 9월 광주·전남지역 42명의 1차 실행위원 명단 발표에 이어 이날 광주·전남 2차 실행위원 80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광주·전남 실행위원은 122명이 됐으며,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 실행위원은 모두 209명이다.

호남을 포함한 전국 534명의 실행위원 중 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가까워 자칫 향후 '안철수 신당'도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안철수 세력의 핵심기반이 호남권이 될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 텃밭의 위협 및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주·전남 2차 실행위원 인선은 시민운동가와 각계 전문가, 전직 관료 등이 주를 이뤘지만, 이중 정치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 67명으로 83.7%를 차지하고 있다.

현역 지방의원 중에서는 이춘문 광주시의원과 옥부호 전남도의원, 김동헌 광주 동구의원 등 무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포함됐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송귀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유창종 전 전남도 농정국장, 정인화 전 광양부시장, 강기삼 전 무안부군수, 박만호 전 장흥부군수 등 관료 출신도 상당수 포함됐다.

◇여야는 '평가절하'=여야는 이날 내일의 실행위원 추가 인선에 대해 새 정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평가절하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때 불었던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거품이 빠지면서 실체가 드러난 만큼 제2의 안풍은 없다고 일축한 반면, 민주당은 범야권 인사들만 주로 영입한다고 쓴소리를 하면서 야권 내부의 권력지형 변화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전국 조직화 어디까지 왔나='내일' 측은 아직 실행위원이 인선되지 않은 대구와 경북, 강원 지역에 대한 인선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인선된 실행위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내 조직화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실행위원들은 지역민과 소통하는 창구역할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인재영입 활동은 물론 지역민이 공감하는 비전과 실천방안을 설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일' 측은 실행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정치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지역에서 취합된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내일' 측은 이와 함께 송호창 의원을 중심으로 중량감 있는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인재 영입작업에 고삐를 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권 포기해 기득권 버리는 모습 보여야"

손학규 고문 광주 발언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 8일 "민주당이 기득권인 지방선거 공천권을 포기해 기득권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날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동아시아미래재단창립대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그동안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며 세력 다툼과 땅 따먹기를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지방선거 무공천을 내세웠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야당이 강력히 추진하면 여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미적미적하는 것을 보는 국민의 눈이 어떠한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내 탓이오'하는 성찰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민주당 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손 상임고문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경제정책, 복지정책 비판과 함께 최근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 '통진당 해산 추진' 등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 관련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명명백백한 증거가 나오는데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국가기관이 이러면 안 된다는 대책조차 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진당 해산 추진에 대해서는 볼테르의 "나는 당신 말을 부정하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는 절대 존중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박근혜 정부를 꼬집었다.

그는 "통진당의 북한에 대한 석연치 않은 자세 등 노선이나 정치 행태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법이라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발상 또한 동의할수 없다"고 말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날 지지세력의 울타리 기능을 할 광주·전남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총회에서 기조강연 통해 "2013년 체제가 아니면 2018년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차기 대선에 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분산"

여야 의원 106명,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 추진

개헌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 106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8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헌법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헌추진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임 소속 의원 30여명이 참석하는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10일 "개헌 논의를 속도감 있고 구체적으로 진행해 내년 상반기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개헌을 위해 별도의 국민투표를 해 예산을 낭비할 것 없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주장했다. 개헌을 하려면 유권자 과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는 모임에 소속된 의원들이 전원 서명할 경우, 44명의 서명을 더 받으면 개헌안 발의 요건(재적의원 과반인 150명)을 채울 수 있다. 이어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모임은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도 올해 정기국회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개헌안 성안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자체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모임은 아울러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별로 '개헌추진 국민운동'도 결성하기로 했다.

개헌 로드맵의 논의를 위해 조만간 1박2일간의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이 모임이 개헌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군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으며 18대 국회 당시 개헌을 역점 추진했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분산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총론에 공감을 나타내는 의원들은 현재도 다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여온 데다 여야 간 대치 정국 속에 이어지고 있어 개헌 활동이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INNOVATIVE CHOSUN
HAPPY UNIVERSITY

대한민국 대학의
기준이 넓어진다

조선대학교는 국내 15위를 넘어 세계화, 정보화, 융합과 통섭의 완성을 향해
산학연계 정보화 및 연구 인프라 확충으로 이미 한국을 넘어 세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호남최고의 명문대학의 발돋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호남지역 대표대학 조선대학교가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新 조선주의 —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창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대학으로 출발한 조선대학교는, 교육으로 나라를 부강케 한다는 처음 그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도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辛 조선주의 — 만족하지 않고 더 뛰겠습니다
강한 글로컬(Glocal), 다양한 융합전공을 창출하는 조선대학교는, 미래형 인재상인 통섭 인재 양성을 위해 잠시도 쉬지 않겠습니다.

信 조선주의 —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호남 거점 명문으로 키워 주신 조선대학교는, 특화된 국제화 전략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대학으로 웅비해 나아가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2014학년도
신입생 수시2차 모집

전형유형 및 모집인원

일반학생전형		2,148명
특기자전형	체육	120명
	무용	25명
	미술	9명
특수교육대상자전형(정원 외)		14명
계		2,316명

접수기간 2013. 11. 11(월) ~ 11. 15(금)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http://www.chosun.ac.kr
입학문의 조선대학교 입학처 ☎ 062)230-6666

facebook chosununi
twitter @chosun_univ